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상한' 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연구원의 황씨 해임 처분 부당"...연구원, 재심 청구

2012-08-22 07:00 CBS 홍영선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내부문제를 지적한 직원을 오히려 비리 직원으로 몰아 해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 ◆ 법인카드 부정 사용 적발했다가...

황모(45)씨는 3년 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3월 초 황씨는 연구원의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선 안되는 곳에서 사용하거나 정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황씨는 곧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를 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조직의 사기문제를 거론하며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연구원의 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가 드러났고 황씨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갔다.

황씨가 회계 담당 책임자로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덮으라는 원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 졸지에 징계 사유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황씨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 ◆ 연구원 "횡령, 배임 혐의다" VS 황씨 "단순 업무 착오다"

게다가 연구원은 황씨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황씨가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고 연봉을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기관 설립 초기 채용지침을 개정한 것을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황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황씨도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2010년 경력 재산정시 자신의 경력이 일부 부풀려지고 연봉이 높아진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자기 부하 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한 것이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2010년 경력 재산정시 황씨를 포함한 15명에 대한 경력 산정에 있어 오류가 나타났다.

황씨는 "연구원이 설립된지 얼마 안되고 경력직 입사자가 대부분인데도 경력 산정방법과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간부회의 및 인사위원회 보고를 통해 연봉을 확정하고 통보한 것이지 자신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 내부 문제를 제기한 자신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황씨는 이 문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소했고, 지노위는 최근 연구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구원은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씨도 공공기관이 내부 비리를 밝혀낸 직원을 오히려 비리 직원으로 몰아 해임했다며 21일 서울 행정안전부에 연구원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hong@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닫기